

2008 국제학술회의

21세기 부강한 중국의 등장과 환 황해 시대

서 진 영
(고려대학교)

21세기 부강한 중국의 등장과 한 황해 시대

서진영(고려대학교)

21세기의 최대 화두는 부강한 중국의 등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중국은 개혁 개방이후 지난 30년간 년 평균 두 자리 숫자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급속도로 경제대국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미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금세기 전반기에 일본과 미국을 차례로 추월해 마침내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 될 날도 그다지 멀지 않았다. 이처럼 중국 경제의 급성장과 더불어 중국의 정치적·외교적 영향력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중국의 영향력은 아시아 지역을 넘어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21세기의 새로운 강대국으로 화려하게 등장하고 있다.

이런 부강한 중국의 등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착잡하고 복잡적이다. 일부에서는 부강한 중국의 등장으로 주변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더불어 중국 중심의 패권적 질서를 추구하려고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그리고 중국이 새로운 패권국가로 등장하는 과정에서 기존 강대국들과의 마찰과 충돌로 국제질서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중국 위협론을 강조하기도 한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부강한 중국의 등장으로 강대국 간의 경쟁과 세력 균형이 유지될 수 있으며, 보다 다원적이고 상호의존적인 지역 질서와 국제질서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고, 중국의 발전 효과가 확산되면서 주변 국가들도 중국과 더불어 공동 발전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물론 부강하고 역동적인 중국의 등장이 국제사회에 ‘위협’이 될 것인지, 아니면 ‘기회’가 될 것인지는 사전에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의 반응과 대응에 따라서 위협이 되기도 하고 기회가 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냉정한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부강한 중

국의 등장과정에서 과거 강대국 정치에서 흔히 반복되었던 것처럼 신·구 강대국 간의 상호 경쟁과 불신, 갈등과 대결, 그리고 마침내 전쟁과 같은 파국적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의 국제사회에서 부강한 중국의 등장이 ‘평화적 일어남 (和平崛起)’으로 표출될 가능성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첫째로 21세기는 20세기와 달리 체제와 이념의 대결보다 경제 이익 중심의 실리를 추구하는 실용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 둘째로 세계화의 확산과 상호 의존성이 증대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윈-윈 게임의 여지가 대폭 확장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셋째로 대량파괴 무기체제의 확산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강대국 간의 전면전의 위험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전쟁을 정치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되고 있다는 점 등이 모두 강대국 정치가 대결과 충돌보다 상호 공존과 상호 협력을 모색하게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부강한 중국의 등장이 평화적 일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로는 무엇보다도 중국 자신의 현실 인식을 지적할 수 있다. 즉, 오늘날의 중국은 기존 국제질서를 타파하려는 변혁 추구 세력이 아니라 미국과 서방세계가 주도하는 현재의 국제질서를 인정하면서도 기존 질서 안에서 자신들의 역할과 이익을 확대하려고 하는 ‘체제안의 개혁세력’ 또는 ‘현상유지 세력’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 2007년 10월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7차 당 대회에서 후진타오 총서기는 ‘중국의 발전이 세계와 떼어 낼 수 없고, 또한 세계의 번영과 안정 역시 중국과 유리될 수 없다 (中國發展離不開世界, 世界繁榮穩定也離不開中國)’고 주장하면서 이 같은 중국의 현실 인식을 확인하였다. 이런 점에서 상당기간 중국은 지속적인 발전과 번영을 달성하기 위해도 국제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견지하려고 할 것이고, 또 국제 사회 역시 중국의 발전과 안정 없이 세계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게 되면서 부강한 중국의 등장이 위협보다 기회가 될 가능성이 더 많아 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의 등장이 위협보다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 있다는 점은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사실 중국의 비약적인 발전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의 많은 국가들에게 경쟁과 위협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중요 교역 대상국이며 수출 시장이고 투자 대상국으로서 중국의 발전이 이 지역 국가들의 발전을 촉진하는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

서 중국의 발전이 동아시아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면서 21세기는 중국과 더불어 아시아 전체가 공동 발전하는 새로운 아시아의 세기 (Global Asian Era)가 전개될 것이란 예상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사실, 20세기 후반이후 동아시아지역, 특히 환 황해지역은 아시아 경제, 나아가 세계경제를 추동해 가는 관심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지역에는 후발 근대화를 주도한 일본, 개발시대를 이끌었던 한국과 대만, 그리고 신 개발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이 집결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중·일 3국과 대만과 홍콩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환 황해 경제권은 1970년대부터 경제성장률과 수출증가율에서 세계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등 역동성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아시아 경제와 세계경제 내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특히, 중국의 개혁 개방정책이 아시아의 새로운 수출과 수입 원동력을 만들어 내면서 아시아 지역의 경제발전을 추동하고 있으며, 중국의 역동적인 경제발전과 더불어 주변 지역과의 경제통합도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 대만과 홍콩 등 환 황해지역 국가들 사이에서는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 문화적 동질성, 경제적 상호 보완성을 바탕으로 역내 교역과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역내 상호 의존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다자간 협력체제에 대한 탐색 작업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물론 탈냉전과 부강한 중국의 등장이 이처럼 긍정적인 측면만 보여 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이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면서 한·중·일 3국간에는 상호 협력과 동시에 미묘한 상호 경쟁과 견제 현상도 아울러 표출되고 있다. 특히, 전통적으로 지역 강대국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과 일본은 높은 경제적 상호 의존성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민족적 문제로 갈등과 긴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경쟁과 갈등, 불신은 중국과 일본에게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한·중·일 3국은 물론 대만과 북한까지 포함한 모든 환 황해권 국가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환 황해지역에는 아직도 지역공동체 형성의 장애요인들이 많이 남아 있다. 탈냉전시대에도 남북한 문제와 양안관계와 같은 냉전시대의 갈등요인이 그대로 남아 있고, 활화산처럼 언제 분출 할지 모르는 영토분쟁 이슈들과, 일반 국민들의 정서를 일시에 냉각시킬 수 있는 역사문제와 과거사 문제와 같은 민감한 이슈들도 잠복해 있는 상태이다. 더구나 동아시아지역에서는 오랜 역사적,

문화적, 그리고 경제사회적 교류에도 불구하고 개별 민족국가에 대한 집착과 전통이 아직 강력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실리적-타산적인 이익만을 기초로 지역 공동체나 다자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상누각이 될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정부는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높은 상호 보완성을 바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미래 지향적 한일-한중-중일 관계를 구축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한·중·일 3개국 정부 지도자들의 상호 협력 노력은 역사문제나 영토문제와 같이 민족 정서를 자극하는 이슈에 걸려 후퇴하거나 왜곡되는 일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처럼 민족국가와 민족주의 정서가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환 황해 지역에서 중앙 정부가 중심이 되어 지역 협력 체제를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고 불안정한 작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주권 국가로서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지역 협력 사업은 민족주의적 정서에 취약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상호 협력과 공동 번영보다는 경쟁과 갈등을 조장할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사실 중국이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고, 환 황해 지역이 21세기 아시아 경제의 중심 지역으로 떠오르면서 한·중·일 3국간에는 '황해'를 둘러싸고 동북아 경제 주도권을 잡기 위한 미묘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중국은 최근 발해만의 중심인 텐진을 자유무역특구로 지정해 한국의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응하려고 하고 있고, 한국 또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이어 경기도·충남, 그리고 전북 새만금 일대의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을 선정하여 환 황해 경제권에 대비하고 있다. 일본 또한 동북아 경제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해 신칸센을 축으로 3대 대도시권을 묶는 열도 도쿄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한·중·일 3개국은 황해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역내 경제협력을 모색하고 있지만, 그 접근방법과 전략에서는 약간의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환 황해 지역 협력을 중국 내부의 지역 발전이나 개발 문제의 관점에서 보는 경향이 있고, 한국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의 안정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면서 국가 주도의 경제협력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일본은 정부 간 협력보다는 역내 지자체나 도시, 그리고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협력을 선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런 3가지 방식, 또는 전략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각국이 처한 정치적-경제사회적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세 가지 접근 전략이 반드시 상호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국가 주도와 민간 주도의 접근 방식을 보완하여 동시에 추진하는 새로운 방식의 지역 통합 전략을 시도해 볼 수도 있다. 즉, 국가(중앙정부)가 모든 지역 협력 사업을 직접 관장하려고 하기 보다는 국가는 제도와 규범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지방정부와 민간 차원에서는 높은 경제적 상호 보완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환 황해시대의 내실을 구축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정부 간 협력은 이 지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민감한 장애요인과 수시로 분출할 수 있는 민족주의적 정서로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포괄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국가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이 지역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지리적 인접성과 경제적 상호의존성, 그리고 문화적 동질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부강한 중국의 등장을 이 지역 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면서 이 지역 모든 국가들의 공동 번영과 공존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 협력의 제도와 규범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역할을 일정한 정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국가가 지원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역협력체제의 모델을 추구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오늘의 이 모임이 국가와 민간의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개방적이고 자발적인 새로운 형태의 지역협력 체제를 추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끝)